

都市와 漁村의 論理

劉 忠 烈*

On the Relation of Urban and Rural Fishing Villages

Yu, Chung - Yul

目 次

양해의 말	
I. 漁村의 本質	1. 都市의 崩壞
II. 都市의 論理	2. 漁村의 危機
III. 解體의 論理	IV. 맺는 말

양해의 말

지난 해 문화와 문명이란 저술을 펴낸 일이 있었다. 이 속에서 문화란 공동체 구성원간의 구심력, 응집력에 관련된 가치의 체계를 가르쳐 정의했다. 또 한편으로 다수의 사람에 적용되는 보편성 척도로서 확산력, 원심력에 관련되는 가치들을 문명이라 규정하면서 수산물과 수산업이 어떻게 적응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저술해 보았다.

특수한 사항에서 어떻게 보편에 접근할 수 있는가가 가장 관심을 가진 분야이기도 했다. 문화와 문명이란 이원론적 입지에서 진실에 근접하려는 학문적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짐을 밝혀 둔다. 하기가 오늘의 문명을 주도하는 유럽 기독교 물질문명의 근간은 이런 이원론에 바탕을 둔다. 필자도 비록 동양 한자 문명권에서 생을 이어받고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겪은 경력이 유럽문명의 세대를 지나치게 입었기에 불교적이며 동양적 일원론 사고에 미치지 못함을 솔직히 시인한다. 앞으로의 세기에는 일원론적 사상이 대폭으로 이원론에 첨가되면서 地球村의 균형은 이룩되리라 믿는다. 불교가 지향하는 일원론적 사고는 諸行無常, 色卽是空, 善惡不二, 身土不二 등의 규범을 들 수 있다.

유럽의 정신사에 맥맥히 흐르고 있는 이원론은 反意語(ANTONYM)의 양극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리할 수 없는 모순을 인식하려는 자세이기도 하다. 精神과 物質, 善과 惡, 天國과 地獄, 自由와

* 부산수산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秩序, 靈魂과 肉體, 理性和 感性, 古典主義와 浪漫主義, 個人主義와 全體主義, 이들 양극단에 적용되는 원리가 두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모순으로 인식함이 아니고, 이 한계속에 현실을 超越할 수 있는 地평이 있을 것이란 관념에서 이원론이 이용되었다.

필자는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원리로 구심력과 원심력으로 문화와 문명을 이해한 것처럼 어촌을 알기 위해 도시를 대비시키는 이원론적 방법을 택한다. 도시와 어촌을 지배와 피재배, 생산과 소비지역으로, 가치의 창출과 소모, 쇠망과 부흥이란 단순논리에서 벗어나는 관념을 찾고 싶은 것이다. 이런 작업을 통해 이 연구가 필생의 목적인 이원적 연구과제인 문화와 문명에 직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정표로 참가시키고 싶은 것이다.

유럽문화를 쌓은 또 하나의 방법론은 변증법적 사고의 보급이다. 正-反-합이란 사고과정을 통해 과학적 사고를 일방 진행형으로 나아가도록 관행화 시켰다. 관념의 합목적적인 진행뿐 아니라 사회 역사의 발전도 이 방법으로 이해하려 한다. 여태 모든 사회 경제 정치의 진행은 농촌 어촌에서 도시로 라는 도식으로 설명되고 있었다. 도시국가의 형성, 도시간의 패권다툼, 산업사회의 출현과 도시화의 진전 등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유입으로 진행목표가 설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선진국의 도시는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지며, 도시에서 교외로, 전원도시의 각광, 도시근교 농어촌 생활의 동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변증법적 논리로 이해해야 할지, 아니면 순환론적 논리와 문화현상으로 받아 드려야 할 지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원론의 한계를 들어내고 있다. 농어촌의 해체를 가속시킨 원인이 도시의 공동화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의문을 내포하면서 도시와 어촌의 문제, 존립의 가치 면에 접근하려는 뜻으로 이 연구를 시작했다.

I. 漁村의 本質

어촌이란 어장을 이웃에 두고, 어획물을 채집 증·양식하여 쉽게 양륙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을 갖추고, 이런 생산활동에 적용된 가치를 균히게 하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며, 이웃마을과 연결되어 당시의 소비수준에 걸맞은 생활양식을 갖는 일정범위의 취락을 구성한 공간을 어촌이라 정의할 수 있다.

어촌은 어획물 생산을 위해 형성된 마을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어획물만을 대상으로 생활한다는 마을은 외딴 섬과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 농업과 어업이 공존하는 형태로 존재되고 있다. 그러나 마을의 총생산물중 어획물이 얼마만큼 이상이나 이하일때를 구분하면서 어촌 또는 농촌으로 획을 그을 수는 없다. 가장 확실한 구분방법은 공동체 운영의 가치체계가 농산물의 풍요를 기준한 의식(儀式)으로 지배될 때는 농촌이라며, 항해의 안정이나 풍어를 위한 의식이 사계절을 통해 지배적인 전통으로 수립된 마을일 때 어촌이라 구별지음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지배적인 산업이 농업으로 영글어진 민족성인 점을 감안할 때 어촌의 의식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함은 매우 희귀한 전통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촌 속에서나 일부분 어촌적 전통이 지켜지는 공

동체까지를 일단 현실적으로 어촌의 범주로 넣어야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산업을 위한 생산수단의 제도를 갖고, 어업권 행사를 위한 공동어장의 사용이나, 생산과 유통을 위한 유효한 조직을 갖고, 양륙시설을 갖고, 상당수의 가공시설을 마을안에 갖는, 생산과 휴식을 위한 시설을 공동으로 갖는 취락일 때는 이를 어촌이라 정의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원초적으로 우리의 조상이 이곳에서 수렵이나 채집 생활이 아니고, 농업이나 어업이라는 생활양식으로 정주(定住)하기 시작했다는 시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민족의 정주생활은 농경의 시작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땅에 언제부터 농경이 시작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어업도 진작되며 이런 환경에서부터 농촌과 어촌의 생활양식이 도입되었다고 봄이 정설이다. 이전의 수렵이나 채집 그리고 어로의 단계는 생존과 존립만을 위한 경제이며 이동생활을 근간으로 했다. 이때는 아직 취락을 구성하며 공동체 결속을 위한 문화가 명확히 표출된 시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이 땅에 생존한 한에 있어서는 그 나름의 문화수준을 지녔다는 견해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단계는 구석기시대이며 원시적 문화단계로 규정한다.

이곳에 간단한 석기문명과 천동기이기(利器)를 가져 생활하던 시기로부터 정주생활이 가능했고, 농촌과 어촌이란 취락이 형성되어 나간 시발로 보고 싶다. 한반도에는 원래 구석기 시대로부터 도착했던 인종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체격이나 생활양식을 나타내는 고고학적 유물이 희귀하여 아직 명확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 농경 특히 쌀의 도입을 둘러 이 땅에 정주생활 취락 형성의 시대에 시각을 맞추어 종족이동을 살펴본다.

우리 민족의 형성에 앞서 인종상의 이동은 크게 보아 두 가지의 경로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는 연해주를 통한 북방계 종족의 이동이요, 다른 하나는 양자강 유역에서 농경문화를 가져 흘러들어 왔다고 보아지는 종족이동이다. 북방계는 청동기 문명을 앞세운 강력한 수렵계의 호전적 종족이며, 남쪽에 들어온 종족은 농경을 다루며 높은 생산성을 갖는 인종이라 추측된다. 이들이 이 땅에서 피의 혼합을 통해 문화를 창출하며, 공동체를 형성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류의 진화과정에서 식생활의 개선은 뇌, 두개골, 얼굴부분의 형태를 변화시켜 나아간다고 함이 정설로 믿어지고 있다. 육식의 증대, 불 요리의 시작, 곡물의 생산 등은 씹는 힘을 줄이며, 이런 물리적 충격은 턱과 이빨을 적게 하며, 다음으로 두개골과 얼굴형체에 변화를 준다. 이를 인체의 섬세화 형상이라 하고, 지금도 이런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오랜 시간에 걸친 변화보다 더욱 직각적이며 눈에 두드러진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유전학에서는 HETEROISIS(雜種強勢)의 효과에서 찾고 있다. 가축이나 재배식물의 잡종 제1대가 신체의 크기나, 내성, 다산성의 면에서 윗대보다 우수함을 밝혀 내고 있다.

사람도 이런 잡종강세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미국에 이민간 유럽인의 신체구조 변화에서 설명하고 있다. 코카소이드계통의 인종은 통혼권이 확대되면서 長身, 長頭로 향하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그러나 몽고로이드계통의 인종은 잡종강세의 효과가 長身 短頭방향으로 변화됨을 설명하고 있다(池田次郎著, 日本人の起源, 1982, 講談社). 특히 도시화의 진전은 현재도 젊

은이의 신체구조를 長身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농어촌보다 효과적이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즉, 농어촌보다 통혼권이 넓어지면 질수록 잡종강세의 효과가 크게 미친다는 설이다.

우리들의 조상들에게 생식집단간의 유전적 혼합을 일으킨 첫번째의 변혁기는 이땅에 들어온 양종족간의 문화패권수립을 둘러 일어난 피의 혼합이다. 북쪽에서 들어온 금속문명과 남쪽의 稻作文明이 혼합되면서 정주생활과 우리 고유의 문화를 창건했다. 비교적 이런 신체적 유물이 많이 발견된 일본의 고대 농경사회의 출현기를 둘러 우리 역사를 뒤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았다. 일본의 고고학적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수렵과 채집에 의존했던 신석기 이전의 단계를 繩文時代, 농경 특히 쌀경작을 시작하면서를 彌生(야요이)시대, 국가의 형체를 수립하기 시작한 古墳시대 등으로 구분한다.

이중 야요이시대의 쌀경작은 전적으로 우리땅에서 넘어간 역사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의 繩文무늬시대에 대칭되는 우리의 단계는 櫛目무늬토기시대에 해당된다. 彌生(야요이)시대는 無紋토기시대와 비슷하게 대칭되었다. 농경공동체로 기반을 구축하게 되는 시기는 일본은 彌生(야요이)시대이고 우리는 無紋期가 해당된다. 이때는 대개 BC3000~AD300년간의 시간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기원 1세기경부터 삼한과 가야시대에 들입되는 국가형성의 시기에 해당된다. 농경 특히 쌀경작을 중심한 정주생활이 폭넓게 도입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일본은 BC300에서 4~5백년간에 걸쳐 우리의 청동기문명과 농경방법을 도입했음이 정설화되어 가고 있다. 이들보다 한 발 앞서 우리는 1세기부터 농경과 국가형성을 이룩하기 시작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어촌의 형성이 농촌과 별개의 원인과 독립성으로 이룩되었느냐에 관한 의심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일본은 대륙으로부터 渡來人과 토착인들 간의 인종상의 갈등 흔적이 비교적 많이 출토되는 곳이다. 구주의 평야부와 긴기(近畿)지역의 유골에서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인종의 잡종강세를 나타내는 인골을 발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의 어촌형성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지역은 구주지방이다. 이 지역의 고고학적 유골을 3개 분야로 구분 지을 수 있었다. 첫째는, 長身 高顔부류이다. 이들은 구주북쪽의 평야부와 본주의 동해연안에 분포되었던 종족이다. 주로 농경에 종사하며 渡來人과의 심한 혼혈의 결과 생긴 신인류에 해당될 것이다. 둘째는, 나가사끼(長崎)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과 도서에 분포한 低身 低顔 부류이다. 이들은 이빨빼기(拔齒)관습을 지니며 繩文人의 체형을 완성시킨 종족이다. 셋째는, 싸추마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과 그 인근 도서에 분포하는 低身 短頭를 특징으로 하는 부류이다. 이들 중 특히 둘째의 인종이 해안에 정착하면서 어로 전업을 하면서, 다양한 어구를 사용하면서 어획을 했다는 사실이 유물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벌써 이 시대에 낚시, 작살, 어망을 위한 명(錘), 문어당지, 속임낚시(擬餌)등의 유물을 찾을 수 있었고, 彌生(야요이)시대의 말기에는 집단어로를 했을 것이라 믿어지는 지예망 어망에 쓰이는 명(石錘)도 발견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어촌을 형성시킨 종족과 농경을 시작했던 인종간에 완전히 구분되는 신체상의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명확히 농경인종과 어로인종을 구별지우는 유적을 찾지 못할 뿐 아니라 아마도 같은 종족이 북쪽 남쪽에서 이땅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정주한 자연적 환

경에 적응되면서 농경을 택하거나 또는 해안에서 어업을 선택한 문화를 창건한 것으로 믿어진다.

위의 자료만으로 남한과 북한, 해안지대와 내륙지간 신체적 차이를 판별하기는 힘들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태초로부터 균질적 체형으로 굳힌 인종적 특성을 지녔다고 본다. 해안에 인접하여 정주생활을 시작하면서 어촌공동체가 형성되

<고대인의 유골비교>

(단위 : Cm)

분 포	身長	上 顔 高
南 韓, 朝 島	163.0	79.1
禮 安 里	163.1	71.8
北 韓, 雄 基		74.5
鳳 儀		71.0
草 島	160.7	71.0

어 나갔다. 통일국가를 이룩하면서 토지소유 체제가 완성되어 나갔다. 이 과정을 통해 농촌과 어촌의 이동은 인위적으로 억제됨을 강요받는다. 이런 체제를 봉건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농촌은 그들 고유의 문화를 창조했고, 어촌은 어업생산이란 경제에 적응된 공동체 유지의 문화를 창건했다.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며 해체되지 않으려는 가치체계를 어촌문화라 정의한다.

한민족은 여러 번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전국적으로 신체적 균질성을 유지했고, 문화적인 동질성을 갖는 백성이다. 어촌과 농촌의 생활의 격차가 심했다라면 농촌속에 흡수되려는 강력한 운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어촌공동체가 유지되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비교적 동질의 생활이 계속되어 나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어촌의 본질을 공동체를 지키며 발전시키려는 가치의 체계를 가르킨다. 이 가치 체계가 몰락되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균질성이 무너지거나 파괴될 조짐을 보일 때 어촌공동체의 몰락을 예언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어촌의 본질과 해체를 관찰하려는 시각을 갖는다. 즉 독립된 어촌문화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키느냐란 과제이다.

Ⅱ. 都市의 論理

도시란 일정공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니 농어촌에 비하여 밀도 높은 인구의 집적공간을 뜻한다. 그렇다고 얼마만한 밀도일 때는 정확히 도시라 하나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다. 농촌과 어촌은 생산공동체이면서 동질의 가치관과 생활스타일을 갖는데 비하여 도시는 생산과 직간접으로 관계를 가지며 이질적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생활하는 거주공간이다. 이질적 사람들을 한곳으로 흡인하는 공간이기에 이에 상응하는 구심력이 있어야 한다. 그요인을 경제성, 신앙, 군사 방위, 생활의 편의, 정치, 교육 등에서 구할 수 있다. 이를 集積이익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이 이익이 순기능될 때 도시는 팽창되며 역기능될 때 도시는 쇠망한다.

다수의 이질적 사람들이 모여 살기 위해서는 일정범위의 질서가 요구된다. 이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수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갖는 억제효과를 갖는 힘이 있어야 했다.

필자는 여기에 필요했던 가치의 체계를 문명이라 규정했다. 인간은 농어촌공동체 형성을 위해 먼저 결속을 다지는 문화를 가져야 했다. 이 문화 중 타의 모범이면서 선망되는 요인들을 한 체계로 묶으면서 문명의 씨앗을 잉태하게 된다. 이 문명을 중심으로 한 곳에 모인것이 도시이다. 그러니 도시

형성의 첫번째 요인은 보편성 있는 문명이 성립되어야 함이 필수적인 것이다.

인간은 농어촌에서 도시로 발전하는 것을 정상적인 일방 진행성의 역사의 귀결로 이해했다. 그러나 금세기에 들어와 도시의 거주환경이 열악한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도심에서 벗어나 교외로 농촌 어촌지대로 삶의 근거지를 옮기는 현상이 두터러지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회현상을 변증법적인 일방 진행성의 논리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지 해결되지 못한 수수께끼이다. 단순히 삶의 편익만으로는 농어촌으로 회귀하는지 아니면 도시역사발전의 순환론을 적용해야 할까의 의문이다.

오늘날 선진국의 도시에는 기존 거주민의 출생율이 격감하고 있다. 핵가족화라는 바람인지, 여자들의 개인주의 의식의 만연인지, 이들과는 달리 새로이 유입된 이방인, 즉 독일의 터키인, 불란서에는 월남 알제리아인들, 미국은 흑인과 히스파닉계들의 출생율은 놀라운 수준의 팽창을 계속하고 있다. 단순히 경제적 이유나 삶의 편안함을 위해 출생율을 억제한다는 행위는 현시적으로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2~3세기라는 간격으로 관찰할 때 생물학적 기준에서 볼 때 훨씬 백인들을 압도할 만큼의 우수한 인종이라 판단될 것이다. 아마도 인간의 문명이 그때까지 지속된다면 유럽, 미국의 도시에는 그들의 잡종들로 우글우글 할 것이며, 새로운 도시 형상으로 변모될 것이 예상된다.

인도-유럽 어족에 있어서 도시형성의 원인은 군사 방위와 신앙설이 정설로 인식되고 있다. 도시를 형성하는데 가장 강력한 요인은 이종족의 침략을 공동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이 자주 벌어졌으며, 이를 물리적으로 효과있게 실현시키기 위하여 도시주위에 외족을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을 쌓았다. 대부분 유럽의 도시에는 이런 성벽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 또하나의 강력한 형성요인은 신앙이다. 신성한 곳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다수의 노동력이 필요했고, 권력의 집중과 계층의 분화가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강력한 통치체계는 동시에 영향력 높은 신앙을 함께 갖는 도시를 이룬 형성했다. 그러니 도시를 이룩한 문명요인은 생명과 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안정성에 관한 보편원칙, 그리고 공동으로 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신앙에 관한 보편원칙이 문명을 창출한 기본이었다.

중국을 중심한 한자문명권에서는 도시와 시장은 동의어가 되고 있다. 아마도 도시보다 시장요인이 먼저 이룩되는 곳이 도시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유교의 경전이 되는 禮紀 地官篇(현재의 국토개발기본법에 준할 것)에 기록되기를 나라를 다스림에 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길에 따라 매 십리마다 飲(음식점)을 두어야 했고, 삼십리 마다 宿(숙박시설)을 개설하고, 오십리에 市(시장)을 두고 농산물의 교환의 편의를 도모해야 함을 요구했다. 漢시대 이후 유교의 이념에 따라 율령체제로 전국을 통치하면서 도시형성도 이에 따랐다. 그러니 일정간격으로 시장을 개설하고 이곳에 상인과 화물이 집적되면서 점차 도시가 형성되어 나갔다고 본다.

물론 이들에게도 공동체형성을 위한 구심력 역할을 담당하던 가치체계는 있었다. 이를 社稷이라며 국가형성 도시창건에 따라 왕궁위치에 옮겼다.

인간의 진화과정에 있어 HETEROSIS(雜種強勢)는 유전학의 정설로 받아들여져 가고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 가장 강하게 이런 혼혈이 심하게 나타난 시기는 두번에 걸쳐 일어났다. 첫째는 청동기문명의 도입과 농경재배를 갖고 도래된 인종들의 혼합기이다. 아마도 기원 4~5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몇 백년간이 해당될 것이다. 이때 우리의 종족상의 형체는 지역별로 굳어졌을 것이다. 두번째가 산업사회의 시작으로 일어난 도시화형성의 결과이다. 여태 농어촌의 특성은 거주지가 한정되며, 수송 정보수단의 미발달로 통혼권은 제약되고 있었다. 권역별로 잡종강세 효과가 나타날 물리적 배경을 갖지 못했다. 세계적으로 보아 우리나라 만큼 같은 핏줄, 동질성 높은 문화를 갖는 민족도 드물다. 그러나 이민족의 형성이 원래 동일한 종족으로 형성되지 않고, 토착의 인종, 북쪽으로부터 들어온 인종, 그리고 양자강 하류로부터 건너온 종족의 혼합으로 형성되었다는 가설을 인정한다면 우리들의 유전형질속에 이질성을 갖는다. 이들이 거대한 도시속에 집적함으로써 잡종강세 효과가 출현한다는 입장을 필자는 지지한다.

몽고로이드종으로서 한국인의 거대한 도시에서 잡종효과가 신체상 나타난다면 長身 短頭 그리고 생활상의 섬세함에 따라 狹顔의 꼴로 표출될 것이다. 이들 잡종강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도시는 아마도 서울 및 수도권지역이 해당될 것이다. 그 이외의 도시는 지역적 중심 중추기능을 갖는 곳이기에 유전적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도시에 집적하는 원인 중에 가장 심각한 요인을 잡종강세에 대한 선망이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원인보다는 인간생명 내면의 본능적이며 생물적 욕구이기 때문이다. 생활의 편의이나 교육을 위해서 도시로 나가야 한다는 희망도 따져보면 후세를 위한 잠재적 본능의 발로로 본다. 한 도시가 거대한 통혼권을 가지며, 그 결과 잡종효과가 명백히 나타난다면 농어촌의 붕괴현상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흔히 신세대라든지 X세대란 말은 이런 면에서 충격을 준다.

인간이 대규모의 도시를 건설하기에는 전염병의 만연, 식량확보의 곤란 등의 위험이 수반된다. 그런데도 도시를 형성하려는 보다 나은 이익, 즉 안전을 보장하는 정치, 군사조직, 풍요한 생활을 보장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경제조직, 정신적 만족을 제공하는 종교조직, 교양과 전문기술을 제공받는 교육조직, 건강을 보장받는 의료조직 등의 혜택이 있다는 믿음에 따라 도시가 형성 촉진된다. 이런 의미에서 도시는 가까운 장래에 썩을 창출하며 충실한 생활을 보장한다는 뜻에서 권력을 탄생시킨다.

농촌과 어촌은 도시민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공급의 장으로 위치가 예측되며, 도시는 외부의 취락으로 농촌과 어촌을 내부화시키며, 그곳의 생활의 질서를 결정한다. 도시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교육, 의료, 종교 등 권력의 조직속에 포함되게 된다. 그런 뜻에서 도시화와 농어촌화는 표리의 관계에 놓인다. 도시와 농어촌의 관계가 지배와 피지배의 도식으로 설명하는 시각적인 인식이다. 이 논리에서는 도시와 농촌 어촌간의 역할적 관계 균형이 깨어질 때 존립의 기반을 잃으며, 새로운 문화문명의 탄생을 모색되어야 한다 함을 뜻한다.

Ⅲ. 解體의 論理

1. 都市의 崩壞

도시는 식량생산의 余剩에서 부터 시작된다. 도시뿐 아니라 공동체내 계층분화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식량생산 노역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잉여인구의 출현에서 가능했다. 이들이 보다 높은 생산성, 삶의 질을 추구하는 문화를 차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이런 힘이 더욱 증대하여 보편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문명을 만들고 동시에 도시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다수의 소비인구가 집적하는 도시를 항시 위협하는 과제는 식량을 둘러 기아에 대한 공포이다. 실제 도시는 식량문제에 대해 취약점을 갖는 것 같으나 오히려 농어촌보다 기아문제에 당면하는 확률은 적다. 전쟁이라는 비상시기를 제외하고 도시가 기아문제로 붕괴될 정도의 위험에 빠진 역사는 없다.

오늘날 세계전체로는 곡물생산은 약 18억톤(1985년 수준)가량 된다. 한사람이 연간을 통해 곡물만으로 생활한다면 약 150Kg이 소요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곡물생산량이 120억명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현재 인구는 약 50억명이려면 70억명분의 잉여가 발생된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매년 4억~11억의 기아인구를 갖는다. 그렇다고 이런 기아인구의 영양만을 위해 곡물생산이 주도된다면 현실적으로는 더욱 많은 기아인구를 발생케 한다. 농업이나 수산업생산은 이런 도덕성에 입각될 때 더욱 어려운 모순을 안겨주기 마련이다.

통치권자는 도시에 권력을 집중시킨다. 전제국가일수록 그 정도는 더욱 강화된다. 특히 권력의 추구를 수도에 집중시키며, 이곳의 식량확보에 실패할 때는 체제의 붕괴까지 몰고 오게 된다. 중국의 청조는 수도를 곡창지역에서 먼 거리에 위치하는 북경에 두었다. 내륙운하를 통해 곡물수송이 가능할 때는 왕조의 권능은 유지된다. 그러나 내란에 의해 운하가 파괴되고 연안항로를 통해 수송해야 했다. 영국의 해군에 의해 운송선이 통제받자 북경은 심각한 식량위기를 맞고, 왕조가 몰락했다.

소련연방의 급격한 공업정책은 우쿠라이나지대를 식량공급의 중심지로 강요했다. 농업집단화와 철저한 식량조달의 달달을 통해 1932~33년 사이에 이 지역에서 약 650만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유목생활에 젖은 카자프인민에게 집단농장에 정착시키며, 가축을 빼고 식량생활을 강요한 결과 그들의 생활을 붕괴시키며, 전 인구의 4분의 1이 질병과 기아로 사망했다고 한다. 이런 희생 위에 공업화를 진전시키며 도시를 개발한 것이 소련의 역사이다.

중국도 공업화의 급격한 추진에 따라 도시가 팽창하고, 도시 식량수요가 증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집단농경방법으로 인민공사의 강행은 체제를 붕괴시킬 만큼의 위험수준에 도달했다. 대부분 제3세계의 후진국은 공업화 도시화를 서두는 나머지 재정의 무리를 초래했고, 격심한 인플레이션을 낳으며, 군사독제의 길을 열게 했다.

국가는 농촌에 있어서 식량부족은 흉작이라며, 농민의 자연재해라는 운명으로, 체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그러나 도시에 있어서 식량부족은 분배의 문제로 인식하여, 불공평이라는

사회문제로 전환시킨다. 계기가 주어진다면 정의의 실현이란 측면에서 과격한 폭동으로 진전될 속성을 가졌다. 이런 점에서 도시의 식량문제는 체제유지란 의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기아는 권력의 정당성을 의심케하는 최대의 계기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사람은 개방적이며 혁신적이라고 표현한다면, 시골사람은 폐쇄적이며 보수성이 강하다고 말한다. 어촌의 노동은 힘들고 위험하나 단조롭다. 거기에 비해 도시노동은 바쁘고 재치있게 융통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가 헤어지고, 인간관계도 일시적이고 일면적이고 익명적이다. 그런데 어촌은 영속적이며 포괄적이고 개별성을 갖는 관계로 맺어진다. 오늘날 정보발신의 권력은 대부분 도시가 갖는다. 도시에서 생긴 가치관, 생활양식, 복장, 음악 등이 어촌의 생활질서를 지배하고 있다. 이중 일부 국가권력에 의해 법제화되어 그 준수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어촌에서 창조된 가치관이 도시에 와서 수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새로운 생활스타일은 도시가 발생근원이 되고 있다. 그결과 어촌의 생활양식을 멸시하고 하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형상이 되고 있다. 만약 이런 관계가 역전될 때 도시의 붕괴를 뜻한다. 어촌과 농촌에서 발생된 질서의식, 가치관이 도시를 압도할 때 새로운 문명의 조짐으로 인정해야 한다.

예로부터 도시에 관한 기본과제는 주택, 환경 그리고 수송문제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물리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품격이 결정된다. 비교적 일찍 도시화가 시작된 곳에는 오랜 시간을 들여 구조물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후진국의 도시는 급격히 도시화를 맞아 무질서한 날조된 형상으로 건설되어 나갔다. 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도시는 도시민에게 순화되고 섬세한 자율의식과 공공질서관을 함양시키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의 미관 상징은 아름답게 건설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오늘날 도시민의 정신적 퇴폐는 다분히 물리적 무질서로부터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약물중독 매춘 범죄 빈곤 등의 사회문제는 어촌을 막론하고 존재한다. 그러나 도시에 있어서 심각성은 이들 사회문제가 대량현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있다. 인간이 본래 찾으려는 善에서 이탈하여 타기할 惡을 찾아 대량으로 향락하려는 행위를 새로운 문화로 정립시키려 한다. 일부일처제의 부정, 남녀간 결합의 숭고성의 멸시, 아이 부양의무의 포기, 노동의 거부, 환각제 상용의 만연, 부모학대등 반윤리적 행위의 일상화이다. 인간이 집단을 형성하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능적 충동을 억제하며 욕구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이를 윤리체계로 묶어 생활의 규범으로 삼는다. 기존의 윤리를 배격하는 새로운 문화의 대량수용은 가치의 체계를 부정하며 '도시의 붕괴를 뜻한다. 「소돔과 고모라」의 전설은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회주의 사상의 근저에는 반도시주의 관념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간의 불균등 발전의 해소가 큰 정치적 목적이 되고 있다. 불균등 발전의 해소를 위해 다만 도시팽창을 인위적으로 억제함에 그쳤으나, 캄보디아에서 커다란 비극적 실험이 진행되었다. 1975년 폴포트파가 정권을 장악하자 도시를 완전히 부정하는 정책을 집행했다. 캄보디아 국민은 농업을 기초로 하여, 청렴하고 건전한 사회건설을 노래했다. 이들의 4년간 통치결과 수도 프놈펜 인구가 200~300만이라 일컬어지고

있었는데, 3만명까지 감축시켰고, 800만 인구중 100~200만명이 학살되었다 한다. 악의 근원으로서 도시를 파괴하려는 실험은 너무나 큰 희생을 치렀다. 그렇다고 도시가 영구히 멸망하지는 않았다. 반 도시주의의 이념만으로는 도시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후진국이나 동남아세아 도시규모의 특수성은 첫째도시와 그 다음 도시간에 격차를 심하게 보이는 일이다. 이들 지역은 도시문제는 수도의 과제이며 나머지는 농어촌의 문제로 처리된다.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불균형꼴이다. 농어촌으로부터 대도시에 유입된 사람들이 슬럼街를 형성시키며, 빈곤과 악의 소굴로 전락되고 있다. 어떤 도시에서는 이런 불량주택인구가 도시전체인구의 2할 수준에 육박한 곳도 있다. 이디오피아의 아디스아베바는 슬럼街 인구가 도시인구의 8할을 점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농어촌에 돌아가기를 거부하며, 그래도 도시생활을 보다 나은 삶으로 선택하고 있다. 도시의 과잉인구는 언제나 폭동 소요로 확대되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권력유지에 위협요소이다.

도시를 경유하지 않고 지방을 통치하지는 못한다. 인간은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줄곧 권력의 집중과 분산이란 역사를 되풀이 하여왔다. 옛날에는 봉건제도라는 제도로 권력의 지방분산을 꾀했고, 최근에는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분산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지방도시의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이해한다. 도시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도시문명이 붕괴되지 않은다는 위기의식에서 발상된 통치방법이다.

2. 漁村의 危機

어촌은 해안이나 하천, 호수에 인접하면서 수산물의 포획과 증·양식으로 생활의 기반을 삼는 취락을 가르킨다. 옛날에는 자연의 입지조건만으로 생산과 거주가 허용된 범위에서 어촌은 성립되었다. 그러나 근대국각의 성립은 이들 어민의 생산활동을 사회간접자본이란 측면에서 도우고 있다. 그 구체적인 시설이 방파제, 등대, 물량장, 어선계류수역 등을 갖춘 곳이 어촌의 기본물리시설이 되고 있다. 어업활동이나 어촌의 생산은 농촌에 비하여 어장의 공동관리 작업의 협동을 많이 요하는 속성을 지닌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촌의 본질을 이런 협업·협동을 할 수 있는 어민의 가치 의식 체계에 둔다. 가치의 체계가 무너질 때 아무리 어항과 어장을 갖는 곳이라 해도 어촌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을 기준하여 어촌을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이런 가치 의식 의사결정이 이룩되는 기관이 어촌계 수협의 조직이다. 그러니 이 조직을 갖는 곳이 정상적 어촌이라 규정한다. 해방 이후 농촌은 어촌에 비해 엄청난 지각변동을 경험했다. 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른 토지개혁이 단행된 일이다. 농촌의 토지 소유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기존의 지주들은 격심한 인플레이 속에서 지가증권이 휴지화되며 계층간의 소용돌이를 겪었다. 어촌의 공동어장은 공유제이며, 기본적으로 소유관계에 큰 변동을 겪지는 않았다. 어업협동조합이란 조직이 그대로 지켜있어 질서의 기본은 정착되고 있는 셈이다.

어촌이라 하여 하나의 어업만에 특화된 마을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외딴섬이나 자연적으로 특정 어업에 아주 유리한 지형일 때는 한 어업만으로 취락이 구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어업은 농업

에 비하여 자본규모가 크며 마을의 모든 사람이 이에 참가되기는 힘들다. 다만 유리한 양식업의 경우는 어장을 균등분배하여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마을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몇 가지의 수산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 그 외 농사도 함께 하는 마을이 지배적인 형태이다. 어민이 대상으로 하는 어업을 유형화시켜 어촌의 형태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어선어업 어촌

어선어장이나 먼 곳까지 출어하는 어선을 모든 사람이 가져 마을을 형성하는 경우, 방파제와 어선계류시설을 갖고 어업만의 전업에 의해 생활하는 곳. 안강망 어선을 다수 보유하는 마을. 일본에서는 건착망의 기지어촌으로 영향력 있는 마을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어선어업, 건착망, 권현망 등은 도시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2) 간석지 어촌

마을 앞에 넓은 간석지가 위치하는 어촌이다. 이곳에서 조개류, 낙지 등의 포획이 가능하며, 간단한 어선어업도 행해진다. 서해안 연안에 위치하는 광활한 간석지는 이 유형에 속한 어촌을 성립시킨다.

(3) 양식어촌

해조류 양식을 공동어장에서 영위하거나, 조개류의 수하식양식을 마을 앞 어장에서 행사하는 어촌. 양식기술을 개발시켜 개인어장을 통해 먼 곳 어장까지 진출한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어촌의 전형적인 형태에 속한다.

(4) 해저생물채취 어촌

지선이 적당한 수심이 깊고 암벽이 많은 어촌은 해저에 고가치의 정착성생물이 서식한다. 이를 나잠이나 잠수도구를 이용하여 채집하는 어업이 전통화된 곳. 최근에는 치패를 살포하여 증·양식으로 자원을 조성하기도 하며, 인공어초를 투입하여 정착성어류의 회류를 조성시키고 있다. 자원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어촌이다.

(5) 정치망형 어촌

수심이나 해류의 흐름을 이용하여 정치망, 죽방렴, 낭장망 등의 고정어구를 이용하여 어획하는 어업을 대상으로 형성된 어촌. 가장 오래된 어촌형태를 갖는 마을이고 전통적 협업관계의 인간관계가 지켜지는 취락이다.

(6) 축양 어촌

회취식의 보급에 따라 횡감의 공급기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 성립된 최신형어촌이다. 축양장은 개인의 자본에 의해 건조되나 이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고용원들로 마을이 형성된 곳.

(7) 관광 어촌

관광위락의 성행과 낚시 취미의 보급에 따라 전통적 어촌의 정취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하는 마을, 주택, 취사, 해수욕, 민박, 낚시터, 지예망 등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도시민의 향락에 대응하는 어촌이다.

(8) 도시 어촌

어획물을 공급하는 취락이 어촌이라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수산물공급의 기지는 부산을 위시한 어항도시가 이 기능을 전적으로 맡고 있다. 대부분 임해지역의 도시는 어획물의 물양장과 어시장시설을 갖고, 거대한 냉장시설도 아울러 갖추고 있다. 어민을 위한 수협조직도 도시내 입지하고 산업사회에 걸맞는 어촌으로 복합적 기능을 맡고 있다. 다만 도시전체로서 수산업의 비중이 점차 하강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 앞으로 수입물의 증대도 이 도시를 경유하여 유통된다.

이상 8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해 보았다. 그러나 이들 유형은 단 한가지만으로 존재되기 보다 몇 가지씩 복합적으로 지니면서 어촌으로 기능되고 있다. 이들 어촌이 앞으로 어떤 운명과 흥망을 겪을 것인가를 몇 개의 지표로서 분석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기도 한다.

공업화의 전진에 따라 농업과 수산업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상대적 비중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산업구조상의 변동은 영세한 산업일수록 부(負)의 상태로 맞는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숙명이다. 거기에서 세계적으로 이념의 대치, 전쟁적 상태가 종식하고 보니, 국가간 경제적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런 환경은 국내산업중 영세 비효율성 높은 산업에 치명적 타격을 주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몫이 농업과 수산업이다.

해방 이후 이들 산업과 어촌생활이 어떻게 변모되었는지를 몇 가지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어민생활에 어떤 충격이 가해질 것인가를 밝혀 본다.

첫번째 충격은 산업구조상의 급격한 변동이다. 해방때(1946년) 농어촌의 인구가 전체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4.4%였다. 비교적 정부통계가 정확성을 띠기 시작한 1960년은 58.3%나 되었다. 고도경제성장을 겪은 1993년에 가서 농어민의 인구비는 12.3%로 축소되었다. 60%의 농어민의 인구가 10%수준까지 감축하는데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약2세기의 세월이 소요되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과정을 30여년에 겪었으니 그 속에 혼란은 상상하고도 남는다. 주로 젊은이가 도시로 진출하고 농촌과 어촌의 취업구조는 노령층에 편중되는 왜곡된 분포를 보이는 변동이다.

농림어업이 국민총생산에 점하는 비율이 1960년에는 36.8%에서 93년 7.1%로 하강했다. 이런 산업사회의 대변동이 농어가 소득과 도시근로자 소득간에 비친 실제적 생활감으로는 실질소득차이는 65년 1.09라는 도시에 비해 유리한 지수가, 93년에는 0.81라는 빈곤감을 나타내는 지수로 표현된다. 즉, 60년대에는 그래도 도시에 비해 농어촌 생활이 경제적으로 10%가량 높은 소득이라는 만족감이 있었다. 이런 경제적 격차가 농어촌의 해체를 일으키는 근본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어촌의 해체를 막기 위해 먼저 강구되어야 할 과제는 어떻게 도시에 비해 경제생활 면에서 열악한 위치를 탈피시키느냐 라는 일이다.

둘째는 어촌의 생활편익의 문제이다. 국내 사회환경의 정비가 진전됨에 따라 농어촌의 사회간접자본양도 개발되어 나갔다. 도로포장율은 65~93년 사이에 0.6%에서 85.6로 지방도로의 포장이 완비되었다. 이에따라 전국의 자동차 이용율이 증대되었다. 94년 현재 농어가의 생활용구의 보유율은 100호당으로 보면 냉장고 108, 세탁기 77, 컬러TV수상기 130, 가스렌지 102, 전화 100, 승용차 13, 컴퓨터 9대의 보유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생활을 위한 물리적 시설의 면에서는 도시에 비해 열악하지 않다.

어촌생활을 기피하는 이유를 계량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의 교육문제, 건강문제, 빈곤문제, 자녀의 결혼문제, 노인부양, 가족원간 대화의 부족, 자녀의 육아 등의 순위로 분포되고 있음을 본다. 대부분 농어촌의 사람들은 고향마을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음을 보이며, 특히 노인층에서는 노후에 도시거주 자녀들에 합류하기를 꺼리며, 그런 반면 이웃 젊은이에게는 농어업의 장래에 비관적이며 도시로의 이주를 권유하는 사례를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40세 미만의 젊은층보다 고령층이 더 강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는 공동체에 대해 결속의식의 과제이다. 필자는 이 요인을 마을 존립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란 입장에서 관찰하는 사람이다. 이들 공동체의 독립성 의지라하며, 이런 자기확인(IDENFICATION)을 거쳐 문화는 확립된다. 어촌의 장래에 희망적이며 해체를 억제할 수 있는 지표를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질문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달려있다. 내딸이 어민과 결혼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느냐, 조건이 비슷하다면 도시의 청년보다 어촌 젊은이에 시집가지를 권유하느냐란 과제이다. 여기에 다수의 어민이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다면 어촌의 장래는 밝다. 그러나 어촌 젊은이보다 조건이 좀 부족하다라도 도시에 나가기를 바란다면 매우 비관적이다. 또 젊은이가 새로운 양식 기술의 도입에 얼마만큼 적극적이나, 개인의 소득과 마을전체의 소득 증대에 어느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느냐가 어촌의 장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어업은 원래 공동으로 협업하는 성격을 많이 띤 산업이다. 특히 공동어장에서 양식업은 특정인의 돌출이 금기되는 분야이다. 그렇다고 개인의 능력에 따른 자기성장은 전적으로 부정해서도 안된다.

혁신적인 적극성을 가져 개인어장을 확대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 요는 균형의 문제이다. 어촌이 하나의 결속력을 갖는 취락으로 존재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증대에 상대한 관심을 갖는 구성원들이 지배적인 분포를 보여야 한다. 마을의 전체이익 증대를 원칙으로 하고, 그 범위를 넘어 각자의 능력에 따른 개발도 허용하는 관리체제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발전하는 어촌, 몰락하며 소멸하는 어촌으로 구분되어 나갈 것이 예상된다.

앞으로 외국으로 부터 값싼 수산물은 무제한으로 수입될 것이 예상된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만큼 방대한 수산물시장을 우리나라는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비교우위가 있는 외국수산물이라 해도 우리어촌이 고유하게 갖는 유리성이 있다. 그것은 어획물의 선도의 우수성, 높은 품질에 대해 기호성이다. 이 두가지의 생산 시장요인을 훌륭히 이용하고 대응시키는 어촌의 장래는 밝다.

IV. 맺 는 말

도시와 농어촌이란 원래 표리의 관계에 놓이는 한 묶음의 인식대상이다. 그런데도 이를 도시어촌이라 구분하여 관찰하는데는 두곳의 존립의 한계를 엿보려는 욕심에서이다. 인간의 문명이 지속하는 한에 있어서는 두곳 모두 존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존립되기 위해서는 지배와 피지배, 패권과 예속, 권력과 복종이란 관계로 맺어지기 보다 조화와 균형, 관용과 미덕, 주고 나눔 등의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짐이 소망스러운 법이다. 이런 관점에서 도시 VS 어촌을 이원론적 인식에서 승화시켜 일원론적 관념에서 이해되기를 바라고 싶은 것이다.

공업화 도시화의 진전으로 어촌지역공동체가 공동화될 것 아니란 의문은 남는다. 그러나 우리민족에 있어서 수산업은 생존산업이다. 민족의 운명과 생명을 함께 하는 산업이란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산업의 기능은 생존되더라도 어촌이란 지역공동체의 장래는 암담할 것 아니란 의문이다. 사실 공동체를 형성하는 어민이 어촌에 살기를 꺼리고 모두다 도시로 이주한다면 마을은 소멸된다. 도시속에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만이 도시민의 의식으로 산업에 기여할 때 어촌문화의 흔적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촌의 생존을 가능할 분수령에 오늘의 사회가 와닿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적 상황을 억제하는 요인이 생태적 사고의 발생이다. 지구의 자연적 환경과 더불어 인간도 생활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보급되고 있다. 여태 인간은 자기중심으로 지나치게 자연을 파괴했고, 도시화는 삼림을 황폐화시키며, 공기의 오염은 한계상황에 다다랐고, 쓰레기 도시하수는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물질문명에서 인간위주의 삶은 반성의 계기를 제공한다. 모든 행복의 기준이 가치의 창조에 두며, 부(富)의 획득에 두고, 개인이 모든 가치중 최고의 자리를 점했고, 효율성과 편리성이 존중되었고 이런 가치는 도시문명에서 찾아졌다.

그러나 점차 사람은 자연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본질을 깨닫게 되었고, 물질을 생산하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시간이란 사고를 갖기에 이르렀다. 누구에게나 한정된 시간을 충실히 소중히 사용하는 삶의 질 높은 생활이란 사실을 알기 시작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 이웃끼리 다정히 보내는 생활, 공동체의 선(善)을 위해서는 자기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사고, 생산과 소비의 경제에도 도덕성을 첨가시켜야 한다는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다. 아마도 다음 세기까지에 이런 의식 가치관의 전환이 예상되고, 또 그래야만 인간문명의 존속이 가능하다. 도시생활에서 농촌 어촌의 삶이 동경 받고 회귀되는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세기의 대전환을 앞두고 어촌의 존립이 위협받는 논의가 활발하다. 어느 때나 역사적 전환기에는 인간은 이런 류의 논의를 했다. 그러나 도시가 존립하는 만큼 역시 어촌도 존립된다. 다만 경쟁사회속에서 항상 유리성을 자체적으로 찾는 노력은 있어야 하며, 공동체로 결속하려는 가치체계는 잊어서는 안된다.